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2021년 3월 23일 Vol. 4 No. 14 ISSN 2635-5981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배경
2. 경과 및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21년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새로운 통상전략을 발표함.

- EU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 [복원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함으로써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계획임.
-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통상전략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각각의 행동 강령을 제시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
- [②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기후중립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 [③ 디지털 전환]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 및 규범 마련
-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국제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 정비
- [⑤ 무역 대상국 확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 및 강화
- [⑥ 공정경쟁] 불공정한 무역관행 배제와 TSD 챕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한 EU 무역 규제 수립

▶ EU의 신통상전략은 급변하는 통상환경하에서 EU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속가능개발 조항 및 디지털 관련 규제 강화, WTO 개혁 논의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통상전략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특히 친환경, 디지털 산업 및 필수의약품 산업에서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 무역과 지속가능개발(TSD) 관련 조항의 이행과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므로 환경, 노동,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1년 11월 개최 예정인 12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 의제가 꾸준히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EU와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신통상전략 발표] 2021년 2월 1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집행위)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신(新)통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해온 산업 및 통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됨.

-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출범 직후 환경 분야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디지털 분야 전략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제시함.
  - ○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을 최우선순위 과제로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 및 통상 정책을 활용할 계획임.[1)]
  - ○ 이와 더불어 회원국의 디지털 산업 및 무역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규제 정비를 목표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음.[2)]
- EU의 신산업전략(2020. 3 발표)과 차세대EU회복기금(2020. 5 발표)은 기술, 식량, 인프라, 보안 등 전략 산업 부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함.[3)]
  - ○ 전략산업에는 로봇 공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 블록체인, 양자 기술, 포토닉스, 산업 생명 공학, 생물 의학, 나노 기술, 제약, 첨단 재료 및 기술 등이 포함됨.
  - ○ 방위산업 및 우주공학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을 조성하여 회원국간 공급망 구축 및 중소·신생 기업을 지원함.
  -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성이 강조된 제약 및 보건 분야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약품 리쇼어링 및 생산 확대를 추진함.[4)]
- 이번에 새로 발표한 통상전략은 '개방(openness)'과 '자율성(autonomy)'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방향을 잡고 일련의 정책 목표와 시행전략을 담음.
  - ○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의 우선과제를 통상이슈와 연계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EU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통상정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둠.

■ [통상환경 변화] 이번 통상전략은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 갈등,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코로나19 유행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으로서 마련됨.

-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기술발전과 급격한 세계화는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 한편, 경제구조 변화에서 탈락한 개인과 공동체를 양산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킴.
  - ○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자 그로 인한 불만족이 자국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서로 이어짐.[5)]

---

1) 장영욱 외(2020),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이상윤(2020),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유럽 데이터 전략"·"인공지능 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제97호.
3) EC COM(2020) 102 final, p. 3.
4) CEPS (2020. 6. 23), "'Coronationalism' vs a geopolitical Europe?" https://www.ceps.eu/ceps-publications/coronationalism-vs-a-geopolitical-europe/(검색일: 2021. 3. 17).
5) Stiglitz, J. E.(2017),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Revisited: Anti-Globalization in the Era of Trump," W. W. Norton & Company.

○ 2016년 영국의 EU 탈퇴를 필두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보호무역과 반이민 정서를 내세운 정치세력이 지지를 얻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탈세계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다자주의 약화는 미국·EU 간 통상 및 안보 분야 갈등,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가시화됨.

○ 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의 미국 측 비중이 대폭 낮아졌고,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의 대EU 수입품 관세가 인상되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지속되었음.[6)]

○ 또한 트럼프 집권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와 제조업 본국귀환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간 디커플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7)]

- 이에 더하여,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8)]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국경이 봉쇄되어 이민이 불가능해지고 마스크, 중환자 설비, 백신 등 전략물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

○ 유행 초기 EU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PP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9)] 지난 2021년 2월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회원국 내 백신 생산공장의 수출 물량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기도 함.[10)]

- 향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역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2015년 파리협정 당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각국은 산업, 노동, 에너지, 수송, 건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디지털 관련 부가가치가 2022년까지 전 세계 GDP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11)]

2. 경과 및 주요 내용

■ EU 집행위는 통상전략 수립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회원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및 산업계, 노동조합,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12)]

- 의견수렴은 △ 복원력(resilience) 강화 △ 사회경제적 회복 및 성장 △ 중소기업 지원 △ 녹색 전환 및 지속가능한 통상환경 구축 △ 디지털 전환 지원 △ 공정경쟁 촉진의 여섯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짐.

---

6) European Parliament(2020. 9. 29),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p. 11.
7) Pisani-Ferry, J.(2020. 9. 29), "Trump's international economic legacy," Bruegel Blog, https://www.bruegel.org/2020/09/trumps-international-economic-legacy/.
8) European Parliament(2020. 9. 29),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EXPO_STU%282020%29603511(검색일: 2021. 3. 17).
9) Financial Times(2021. 1. 27), "Vaccine export rules: what is the EU proposing?" https://www.ft.com/content/875f6a1f-e740-4a4d-b203-24e43c09b654(검색일: 2021. 3. 16).
10) EC(2021. 1. 29), "Transparency and authorisation mechanism for exports of COVID-19 vaccin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308(검색일: 2021. 3. 17).
11) IDC (2020. 10. 29,)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6967420&utm_medium=rss_feed&utm_source=Alert&utm_campaign=rss_syndication(검색일: 2021. 3. 17).
12) EC(2020. 12). "Trade Policy Review 2020: Summary of contributions made."

○ [① 복원력 강화] 의약품과 보호장비 등 필수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의 취약점을 환기시킨 후, 공급망의 다변화·공고화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 [② 사회경제적 회복 및 성장]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보호무역을 비롯하여 비효율적 정부 개입의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자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
○ [③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국제무역과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보 제공, 불공정한 관행 철폐 등 통상 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
○ [④ 녹색 전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지속불가능한 자원 사용 등은 최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과제인바, 무역정책 역시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방안 모색
○ [⑤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 전자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 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 필요
○ [⑥ 공정경쟁] 개방적인 통상환경이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무역관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 또는 신규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상기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는 가운데, EU 회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통상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함.[13)]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은 세계시장 내 장벽 없는 경쟁과 교류가 EU 및 세계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EU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반영함.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는 △ 복원력 및 경쟁력 △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 단호한 규범 기반 협력의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됨.

○ [복원력 및 경쟁력]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복원·다변화하는 것이 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
○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공정경쟁, 노동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무역관행이 확립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
○ [단호한 규범 기반 협력]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
  * 미국, 오타와그룹,[14)] 아프리카 국가, 인도 및 중국과의 대화 채널 강화

- [중기 목표] 이를 위한 세 가지 중기 목표로 △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EU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 지원,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공동의 규범 수립 △ EU의 이익 추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 제고를 제시

■ 신통상전략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 WTO 개혁 △ 녹색 전환 △ 디지털 무역 △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의 여섯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하고, 각각의 '주요 행동 강령(headline actions)'을 제시함.

13) 신통상전략의 주요 내용은 EC Com(2021) 66 final,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를 바탕으로 정리.
14) WTO 개혁에 동참하는 소그룹으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를 포함.

- [① WTO 개혁] WTO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한 개혁 추진[15)]
  - ○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WTO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채택
  - ○ WTO 상소기구 분쟁해결 기능의 완전한 복원
- [② 녹색 전환 지원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증진] 기후중립 경제를 향한 녹색 전환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 ○ WTO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 ○ 기후중립에 관한 G20 국가간 협의 모색, 생물다양성·지속가능한 식량정책·순환경제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및 파리협약을 향후 모든 협약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
  - ○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조항의 효율적 이행과 집행을 위해 '15개 행동강령(15-point Action Plans)'[16)]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무역협정에 반영
  - ○ 강제노동 포함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due diligence)'[17)]를 법제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
- [③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지원]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표준과 규범을 마련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 EU의 경쟁력 유지
  - ○ 데이터 교역과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에 관한 WTO 협정 체결 추진
  - ○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료국가(like-minded countries)들과 긴밀한 규제협력 추진
-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국제표준협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EU의 표준 및 규제 전반을 정비하고,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에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EU의 영향력 강화
  - ○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분야에 대해 동료국가와 규제 관련 대화 채널 구성
  - ○ EU·미국 간 무역 및 기술 이사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등을 통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범태평양 협력 구축
- [⑤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서발칸 반도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지원
  - ○ 서부 발칸 국가를 포함한 유럽 동부의 국가들과 교역 및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 유럽 남부 주변국[18)]과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현대화
  - ○ 정치적 대화를 통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와 협력, 기존 아프리카 무역협정 심화 및 확대, 서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 무역협정의 연계, 아프리카 및 남부 주변국과 지속가능한 투자협정 추진
- [⑥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 불공정관행 배제와 TSD 챕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한 EU 무역 규제 수립 계획
  - ○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주요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 ○ 수석통상감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에서 EU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협정의 잠재적 장애물 제거

---

15) WTO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7, [글상자] 참고.
16) 15개 행동강령은 EU가 FTA 체결 시 포함해야 하는 TSD 챕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문건으로, 2018년에 발표됨.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1803(검색일: 2021. 3. 18).
17) 실사 의무는 유럽 역내 기업 및 무역 대상국 기업에서 노동 인권, 작업장 안전, 환경보호 등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보고·예방·개선하는 행위를 지칭.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82659.html(검색일: 2021. 3. 18).
18) 유럽 남부 주변국(Southern Neighbourhood)은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 등의 국가를 의미

○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EU 기업과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강화 및 수출신용(export credits) 전략 검토

○ 중소기업 포함 EU 회원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온라인 자원 개발

글상자. 신통상전략 부속서: WTO 개혁을 위한 제안[19]

■ WTO는 다자주의 증진을 통한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세워진 중추적인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164개 회원국을 보유한 WTO는 회원국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디지털 무역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에 합의하지 못함.
- WTO는 회원국 내부에서 무역규범이 적절히 지켜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함.
-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WTO의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궐위로 인해 2019년 이후 기능을 못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이 WTO 체제를 우회하여 무역대상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WTO 가입 이후에도 회원국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EU는 WTO 개혁에 찬성하는 소그룹(오타와그룹, FAST)[20] 등과 연대하여 WTO를 개혁하는 구상을 발표함.

- 오타와그룹과 함께 무역 및 보건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EU는 탄소국경 조정,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곧 발표할 계획임.
- 2021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12차 각료회의(MC12) 전까지 무역, 보건, 어업, 보조금, 분쟁해결 개혁에 집중할 예정임.

■ EU의 WTO 개혁안에는 협상의 효율화, 상소기구 기능 정상화, 새로운 규범 정립, 감시기능 강화 등이 포함됨.

- WTO 회원국은 협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에 앞서 복수국간(Plurilateral) 협정을 협상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통해 우선규범을 마련하고, 차후 다른 회원국의 참여를 통해 WTO 전체 규범으로 통합

- 분쟁해결 체제로서의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현재 궐위중인 상소위원 임명을 조속히 처리하여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 상소기구 및 패널의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판결의 법정시한이 준수되어야 하며,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디지털 교역,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범 정립을 위해 ① MC12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② 국가 개입에 따른 경쟁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며 ③ 회원국간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④ 농업시장 개방협상을 재개하고자 함.
-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역할 강화는 물론 WTO 내 위원회와 일반이사회의 감시 및 심의 기능 확대

19) EC COM(2021) 66 final Annex. "Reforming the WTO: towards a sustainable and effectiv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 FAST(Friends of Advancing Sustainable Trade): 호주, 캐나다, 차드, 칠레, 코스타리카, EU, 감비아, 피지,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멕시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네갈, 스위스, 대만, 평후제도, 진먼 및 마츠섬, 영국.

3. 평가 및 전망

■ [평가] 이번 통상전략은 2006년 EU의 첫 포괄적 통상백서 발표 이후 네 번째로 발간된 전략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EU 회원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기존 전략과 차별화되는 특징임.

- EU의 중기 통상전략은 2006년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2010년 '무역, 성장, 그리고 국제문제(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2015년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 등 세 차례 발표된 바 있음(표 1 참고).
  - ○ 개방경제와 다자주의 강화를 통해 EU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은 과거 통상정책과 유사하나, 이번 통상전략에는 EU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자율성에 기초한 공급망 개편이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 ○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역시 기존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불공정 무역관행 및 TSD 챕터 준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또한 이번 통상전략은 디지털, 기후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회복 등으로 요약되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EU가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음.
- 'EU가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주의를 회복한다'는 구상 역시 이번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힘.

표 1. 과거 통상백서에 나타난 EU의 통상전략

구분	2006년 통상백서	2010년 통상백서	2015년 통상백서
제목 (부제)	글로벌 유럽(세계에서의 경쟁)	무역, 성장, 그리고 국제문제 (유럽2020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의 무역정책)	모두를 위한 무역 (더 책임 있는 무역·투자 정책을 향하여)
기본 목표	△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통합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EU의 경쟁력 강화	△ 유럽2020 전략과 연계한 스마트 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 일자리 창출 강조 △ 2006년 통상정책 계승	△ 서비스, 디지털, 인력이동 등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효과적인 통상 △ 절차상의 투명성 제고 △ 유럽의 가치 확산
중점 추진 정책	△ 지적재산권 강화 △ 우선순위 국가와 차세대 FTA 추진 △ 새로운 시장 접근전략 △ 해외조달시장 접근성 개선 △ 무역방어기제의 실효성 검토	△ 적극적 FTA 추진 △ 해외 비관세장벽 철폐: 규제수렴과 협력 추구 △ 해외조달시장 접근성 개선 △ 해외투자정책 수립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수출규제조치 개혁	△ 글로벌 가치사슬 반영 △ FTA의 실효성 제고 △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지속가능한 개발 △ 다자협상 체제의 재활성화 △ 지역무역협정 추진
대중국 정책	△ 상호이익에 입각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무역 및 투자 관계 구축 △ 중국의 지적재산권 준수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촉구	△ 기준과 규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부문 협상 △ 지재권 보호 강화 △ 수입대체, 기술이전 강요, 원자재수출 제한과 같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응	△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 △ 중국의 개혁과 개방 지원 △ 다자무역 체제에서 중국의 역할 강조

자료: EC COM(2006) 567 final, EC COM(2010) 612 final, EC (2015) 요약.

■ [전망] 이번 신통상전략에 따라 EU 회원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보다 기존 WTO 체제를 복원하고 기체결 FTA의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유럽은 글로벌 가치사슬 다각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기업 차원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산업 및 의약품 산업 내 EU 역내 기업의 비중 확대가 지속될 전망임.
  - ○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한 르노자동차에 50억 유로의 긴급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공장 생산량 증대를 걸었으며, 이에 중국 공장의 생산분을 폐쇄 예정이던 프랑스 공장으로 옮기기로 합의함.[21)]
  - ○ 최근 폭스바겐은 EU가 출자하여 설립한 노스볼트와의 협업을 통해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릴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함.[22)]
  - ○ 또한 백신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EU 회원국 생산 물량에 대한 사용권 주장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향후 원재료 및 완제품 자체 생산량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신통상전략 이전에 발표된 EU 통상총국(DG Trade)의 「전략계획 2020~2024: 무역 편」에서 [표 2]와 같은 5대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EU는 신규 FTA 체결보다 WTO 기능 복원과 현재 발효된 FTA의 원활한 이행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23)]
  - ○ EU는 이미 한국, 일본, 캐나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신흥시장 국가 등 다양한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며, 기체결 FTA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 또한 비전통적 통상 이슈(노동, 환경 등)를 통상정책에 포함하는 경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 2021년 말 MC12를 앞두고 WTO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2. 「전략계획 2020~2024: 무역편」의 5대 목표

순번	주요 내용
1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WTO 개혁 주도
2	신규 무역·투자 협정 체결, 기체결 협정의 이행, 감시를 통해 유럽 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
3	기존의 무역보호 기제를 활용, EU 기업과 시민을 불공정 무역투자로부터 보호, 기존의 공약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조치 개발
4	통상정책을 통해 그린딜, 노동, 환경, 젠더, 지속가능 공급망 등 더 넓은 EU 정책에 기여
5	개방적·포용적·투명한 운영방식을 통해 EU 통상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수용도 제고

자료: EC(2020), "Strategic Plan 2020-2024,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 [한국에 대한 영향] 이번 신통상전략은 TSD 챕터, 탄소국경 조정,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 WTO 관련 논의 등을 통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1) KOTRA(2020. 8), 『글로벌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사례와 포스트 코로나 新전략』, Global Market Report 20-017, p. 4.
22) *Business Times*(2020. 3. 18), https://www.businesstimes.com.sg/transport/power-play-volkswagen-abruptly-pulls-plug-on-south-korean-battery-makers(검색일: 2021. 3. 18).
23) European Commission(2020), Strategic Plan 2020-2024,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p. 8,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november/tradoc_159104.pdf(검색일: 2021. 3. 18).

- EU는 무역 상대국과 체결하는 다자 및 양자 간 모든 협정에 TSD 챕터를 포함하며, 향후 환경, 노동, 인권, 젠더 등에서의 조항 이행을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 EU는 2019년 일본과 체결한 FTA부터 파리협약의 효과적이며 구속력 있는 시행을 협정문에 명시하였으며, 기체결 FTA의 재협상에서도 해당 조항의 삽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 한·EU FTA에도 환경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 예를 들어 2018년 EU의 평가에 따르면, 한·EU FTA를 계기로 친환경 기업과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CO2 배출량을 410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었음.[24]
  - ○ 또한 EU의 문제제기에 따라 중재 패널이 '한국의 노동법제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25]
-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역시 주목해야 할 사항임.
  - ○ EU의 독자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탄소누출 등을 막을 수 없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21년 6월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
  - ○ 이를 위해 제시된 '탄소세, 탄소관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 확대적용'의 세 가지 안 중 EU ETS 확대적용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음.
    - * [탄소세] 탄소누출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탄소배출을 추적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탄소관세] WTO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음.
    - * [EU ETS 확대적용] 역내 생산자와 수입업자 간에 차별하지 않으며, 역내 생산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음.
- 디지털 분야 신기술의 국제표준 경쟁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국내 ICT 기술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로봇 공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고성능 컴퓨팅 및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 블록체인 등 EU가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
  -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어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데이터 교류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 2019년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적정성 평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은 2021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26]
- 또한 2021년 MC12 준비 과정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므로,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전략과 대응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EU와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

---

24) EU DG Trade(2018),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p. 264.

25) 단, 협정문에는 '노동 규약 비준을 위한 노력'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판단이 한·EU FTA 협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았고, 2020년 12월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쟁점이 일부 해소됨. https://ee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91986/panel-experts-confirms-korea-breach-labour-commitments-under-our-trade-agreement_en.

26) 이정은(2019),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2021. 3. 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3160393Y(검색일: 2021. 3. 18).